

연구논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른 이유로 투표하는가?:
동원과 시민성의 선거 간 차별적 효과에 대한 연구*

The Effects of Mobilization and Civic Duty on Vote Turnout:
A Comparison between the 2014 Local Election and the 2012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김석호^{a)} · 한수진^{b)}

Seokho Kim · Soo-Jin Han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선거참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국단위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그 차이를 드러내는 요인으로서의 동원(mobilization)과 시민성(civic duty)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인 국회의원 선거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 동원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두 선거에서 드러난 동원의 영향력이 시민성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수집한 2014년 지방선거 유권자 조사자료와 2012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자료를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유권자가 다양한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요청을 받을수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석호.

E-mail: seokhokim@snu.ac.kr

b)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록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으로부터의 후보지지요청을 받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동원의 선거 참여에 대한 효과가 두 선거에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동원과 시민성이 선거참여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의 경우 시민성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에서 동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민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선거에서의 동원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선거참여를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그 효과가 시민성의 수준에 따라 변하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거참여 과정이 선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라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른 이론적 자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한적으로나마 밝혔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동원, 선거참여,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민성, 시민적 의무

Since data on voting behavior firstly were collected in the early 1990s, there has been enorm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in social science, especially in political science in Korea. After local elections were adopted to elect governors, mayors, and local council members in 1995, furthermore, the empirical approach became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in Korean elections. However, the existing studies tend to employ the same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Unfortunately, social scientists in Korea have few explanations for how people differently vote between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Despite the same voter

responds differently to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 for instance, little is known about how local elections are different from national elections. This study attempts to reveal the systematic differences in voting turnout and vote choice between the national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and local elec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mobilization, civic duty, and their interaction. Whether mobilization has differential impact on vote turnout between the 2014 local election and the 2012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and how this effects var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civility are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also verifies how the mobilization effect is moderated by civic duty depend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ele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voters who are exposed to mobilization are more likely to vote in both elections. Second, the mobilization by candidates or political activists is most influential to vote turnout in the local election, while the mobilization by family members or relatives is most salient in the national election. Third, the effect of mobilization is significantly varied by the level of civic duty in local election, whereas it is not in the national election.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bilization and civic duty on vote turnout is found in the 2012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determinants of vote turnout in the national election differ from the ones in the local election, thereby emphasizing the necessity to establish the differential framework to explain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between different types of elections in general.

Key words: mobilization, vote turnout,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local election, civility, civic duty

I. 들어가며

선거참여, 즉 투표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참여의 유형이다. 선거참여는 개인 입장에서는 약간의 노력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참여 방법이다(김석호 2013). 따라서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의 수준과 과정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선거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즉 투표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조사자료의 수집을 통한 정치행위와 태도 분석이 일반화된 199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었다(박찬욱·강원택 2013). 1990년대 초반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이 정당지지, 후보자 특성, 선거 이슈, 지역감정, 세대차이, 선거범죄, 공동체 특성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1992년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존재하는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가 처음 수행되기 시작하였다(이내영 외 1993; 이내영·임성학 외 2011).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기존 선거연구가 한국인의 투표행태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산출된 지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러 연구기관들과 연구자들이 단순 지지도 조사보다 더 심층적인 선거참여 과정과 지지후보 선택과 관련된 세세한 정보를 수집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박찬욱·강원택 2012a; 박찬욱·강원택 2013b; 이내영·서현진 외 2013; 박찬욱·김지윤·우정엽 외 2012). 그러나 기존 연구는 전국 단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투표행태에 대해 동일한 설명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둘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선거참여(voting turnout)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 간에 차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

다(Oliver & Ha 2007). 가령 동아시아연구원이 2010년 지방선거 패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연구에 포함된 주제들이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루는 주제들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이내영·임성학 외 2011). 오직 강원택(2010)과 박원호(2014)만이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간 관계를 조명하며 당시 지방선거에서의 맥락적 특수성이 유권자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각각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참여 메커니즘은 선거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라는 무리한 가정에 의존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Wood 2002; Hajnal & Lewis 2003; Oliver & Ha 2007; Carr & Tavares 2014).

분명 한 개인이 선거참여를 결정하고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은 전국선거와 지방선거가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행태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 주제들이 전부 새로운 것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단위 선거 간의 본질적 차이 및 그 차이가 초래하는 선거참여 및 지지후보 선택 과정에 대한 차별적 결과에 대해 둔감하다. 지방선거 분석 시 정당정체성, 이념, 동원, 정치지식, 분할투표, 현직효과, 세대, 지역주의와 같은 친숙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차별적인 지방선거만의 특수성이 제시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참여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선거참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관찰되는 것들과는 차별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의 선거참여 과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 간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인들로 동원(mobilization)을 제시한다. 동원은 한국사회의 연고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상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행태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부

각시켜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김석호·박바름 2012). 즉 동원의 영향력이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도시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내의 후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동원이 효과적이기도 하다(Oliver et al. 2012). 물론 전국선거에서도 동원의 영향력은 유의미하다(김영태 2012; 김석호·박바름 2012).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권자 수가 적고, 지역적 범위가 좁아 후보자의 선거 조직을 통한 동원 및 득표 활동이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본 연구는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시민성을 고려한다(Panagopoulos et al. 2014). 동원의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시민성이 투철하여 투표를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투표를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는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두 선거에서 분기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시민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차별적 효과가 시민성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수집한 2012년 국회의원선거 자료와 2014년 지방선거 자료를 활용해 동원과 시민성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선거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지방선거와 전국단위 선거 간에 존재하는 투표행태의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연구가 동원과 시민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같은 시도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 태도와 행위의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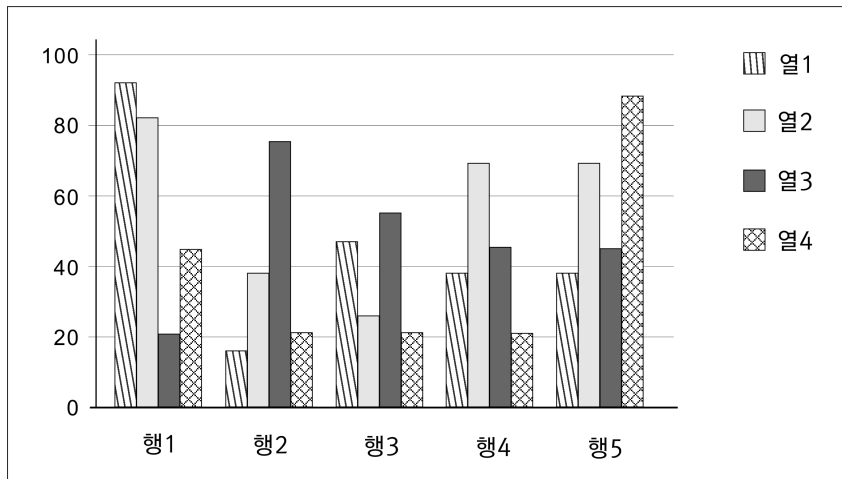
II. 지방선거에서의 동원과 선거참여

동원(mobilization)이란 후보자, 정당, 운동원, 단체 등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며, 이들의 노력으로 인해 유권자가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동원되었다’라고 한다(Rosenstone & Hansen 2003: 35-36). 선거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을 권유하는 동원은 선거 후보자나 운동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직장동료나 상사, 소속단체의 구성원이나 임원,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지지요청을 받을수록 선거판세, 정당의 정책,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Huckfeldt et al. 1995; Nickerson 2008). 물론 동원하는 사람이 선거참여 자체를 요청하는 경우는 정부나 시민단체에 의한 선거참여 캠페인 말고는 없다. 동원은 항상 대상선정(selection)과 설득(persuasion)의 두 단계를 거쳐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궁극적으로 선거참여 가능성을 높인다(Knoke 1990a, 1990b; Brady et al. 1999; Nickerson 2008).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동원을 선거 후보자의 캠페인 전략으로 유권자를 선거참여에 끌어들이는 과정으로 본다. 동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당의 접촉 규모, 접촉 대상, 접촉 방식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김영태 2012). 다른 사회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선거에서 동원의 영향력은 특별하다(김석호·박바름 2012). 한국의 선거에서 사회적 관계에 의한 동원은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 정당정체성,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특성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박찬욱·강원택 2012a). 동원의 특별함은 공적 관계와 사적 연고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김경동(1985)은 한국인의 전형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위계적 권위주의, 집합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도덕적 의례주의, 이분법적 사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등을 규정한다. 정수복(2007)은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을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회피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속도 지상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수단방법 중심주의, 이중규범주의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모든 영역에서의 사적 관계의 중요성 또는 온정에 기초한 공적 영역에서의 선택이다. 따라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행위자로 다루어지면서도(조기숙 2000),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의 요청, 즉 동원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비합리적 행위자로 그려지는 다소 모순적인 존재로 이해되곤 한다(김석호·박바름 2012).



동원이 한국인의 선거참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를 선거참여나 후보자 선택과 연결시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이갑윤 2011; 김영태 2012; 김석호·박바름 2012). 이는 동원의 과정, 유형, 빈도, 강도에 대한 자료가 희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의 선거연구가 기본적으로 정당정체성이나 회고적 투표와 같이 유권자의 심리적 특성, 후보자 요인, 이슈 등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유권자 모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미국의 전국선거를 기준으로 구성된 유권자 모델이

한국의 전국선거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선거에서의 모델이 다시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지방선거에서의 동원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동원이 선거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유권자들은 더 정치에 흥미를 가지며 정치정보를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작은 도시는 지역 내의 후보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동원의 환경을 만든다(Oliver et al. 2012; Oliver & Ha 2007). 지방선거는 후보자들이 좁은 지역구에서 적은 수의 표를 두고 경쟁해야 하고 적은 수의 득표만으로도 당선 가능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후보자 간 경쟁이 전국단위 선거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권자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여러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층위로부터 지지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Oliver & Ha 2007). 지방선거에서의 동원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과 비교해 동원하는 사람과 동원되는 사람 간의 관계가 보다 사적인 연고에 기초하거나 가까울 가능성도 높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경우,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Arceneaux & Nickerson 2009), 동원의 주체와 동원대상자 간의 관계가 친밀할 경우 동원이 선거참여를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김석호·박바름 2012).¹⁾

종합하면, 전국선거와 비교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동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후보자 간 경쟁이 다양한 층위에서 더 치열하고, 후보 지지요청이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지방선거에서 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다.

1) 동원의 효과가 한국에서 항상 효과적으로 판명된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1992년 이후 약 20년 동안 치러진 여섯 번의 선거에서 정당원이나 선거운동원에 의한 동원이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한번밖에 없었다(이갑운 2011). 그러나 이를 토대로 동원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한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자료는 오직 정당원이나 선거운동원의 동원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간 동원 효과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한국 선거의 특성상 유권자에 대한 정당조직, 공식 단체, 모임 등을 통한 정보, 기회 및 감정의 동원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러한 동원이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Kim 1980; 정영국 1993). 그렇다면 동원의 효과가 지방선거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방선거가 가진 지역적 범위나 제도적 특성 등 선거의 맥락적(contextual) 특성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지역의 사회적·인구학적·경제적 특성(Caren 2007), 인종적 다양성(Oliver et al. 2012), 후보자 간 경쟁(Holbrook & Weinschenk 2013), 캠페인 비용(Holbrook 2010), 정당정체성(Wood 2002; Schaffner, Streb & Wright 2001)의 영향력 감소, 정치관심과 지식(Oliver and Ha 2007)의 상승 등 다양한 요인들이 동원의 효과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간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가령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정당이 더 많은 유권자들을 직접 상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구체적 사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은 동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 캠프의 동원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제한적이고 동원의 강도와 구체성 또한 지방선거와 비교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방선거보다 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와 전국선거가 가진 일반적 특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한국의 두 선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는 지방선거나 전국선거 모두에서 후보자와 정당은 조직을 통한 조직선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고(박찬욱·강원택, 2012), 선거 각각을 놓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원은 여전히 모든 선거에서 선거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김영태 2012; 김석호·박바름 2012).

그렇다면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동원의 영향력이 더 막강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동원의 효과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선거참여 과정에서 시민성의 낮은 영향력에 주목한다(Chang 1991; Kim 2011; 김석호 2014). 시민성(civility) 또는 시민의식(civic virtue)은 호혜적 규범과 일반화된 신뢰(Fennema & Tillie 1999; Putnam 1993, 1995), 관용, 의사소통 기술이나 정치적 정향(Green & Brook 2005)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정치참여를 활성화한다(Frisco et al. 2004; Letki 2004). 주관적 시민자질(subjective civic competence)이 높은 유권자들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치적 관여(invovement)가 촉진된다. 즉 높은 시민성을 보유한 유권자들은 동원에 대한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한국의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모두에서 동원은 일종의 상수(constant)이다. 그런데 전국선거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는 시민성이 더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동원이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모두에서 선거참여에 영향력을 가지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는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전국선거에서 낮고 시민성이 약하게 작동하는 지방선거에서 높을 것이다. 물론 시민성도 투표가 유권자의 의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그것이 선거참여에 대해 갖는 영향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Panagopoulos 2010; Strachan et al. 2012; Degan 2013).

그러나 본 연구는 ‘동원의 영향력이 선거유형에 관계없이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이 시민성(civility)이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한국의 선거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선거참여에 대하여 동원과 시민성 간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따라서 동원의 효과는 시민성의 수준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할 것이다(Panagopoulos 2013). 즉 동원이 모든 유형의 선거에서 선거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시민성이 낮은 사람들 또는 투표를 시민의 의무로 생각하는 정도가 약해 후보지지 요청이나 선거참여 부탁을 받지 않았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이러

한 현상은 전국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의 유권자들을 시민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지방선거의 시민성이 낮은 사람들일 것이며, 약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전국선거의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도식적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동원의 효과가 강한 지방선거에서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성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동원이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거참여로 이끄는 정도보다 시민성이 낮은 사람들을 선거참여로 유도하는 정도가 확연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국선거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2014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실시 후 각각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²⁾

2) 동원을 다루는 논문의 그 수도 제한적이지만 서베이를 통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권유받은 경험(동원경험)” 측정 역시 다소 제한적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해 조사된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는 이론적으로 ‘동원’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문항은 다음과 같다. 17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후보나 정당 관계자가 ○○님에게 특정후보나 정당을 찍어 달라고 설득한 적이 있나요?”와 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직접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님께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접촉 방식에 대한 문항(“직접대면,” “우편,” “전화,” “문자,” “메일,” “SNS,”)도 포함하고 있다(김영태 2012;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아카이브 센터 <http://www.ksdcdb.kr>). 특히 면대면 접촉방식과 비접촉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동원의 효과와 접촉방식의 상이성을 설명하고자 할 때 자주 이

2.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종속변수는 “선거참여 또는 투표 여부”이다. 이 변수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각각에서 “귀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니까?”와 “귀하께서는 지난 4월 11일의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니까?” 등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범주는 지방선거의 경우 (1) “투표하지 않았다” (2)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못했다” (3) “사전 투표했다” (4) “선거 당일 투표했다”로 구성되었으며, (1), (2)에 응답한 경우 “투표하지 않음”으로 “0”의 값을, (3), (4)에 응답한 경우 “투표함”으로 “1”의 값을 갖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구성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 “투표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투표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3) “늘 투표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상 하지 못했다”, (4) “투표했다”이며, “투표했다”에 “1”을, 그 외의 값에는 “0”의 값을 부여하여 마찬가지로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본 연구의 핵심적 독립변수는 총 세 가지로, 동원경로, 동원경로의 다양성, 시민성이다. 동원과 관련된 문항은 “귀하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다음의 사람 혹은 단체로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권유를 개인적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이며 그 응답범주는 “가족 및 친척”, “이웃사람 혹은 친구”, “직장의 동료나 상사”, “소속단체(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노조, 직업조합, 동창모임, 친목단체, 문화단체 등)의 임원이나 동료”, “공무원(통장, 이장 포함)”,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부터의 권유이다.³⁾

용되는 변수이다.

3) 본 분석에서 활용된 2014년 지방선거 자료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 설문문항이나 응답범주가 동일하나, 동원을 측정하는 응답범주에서는 약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해당 집단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1”, 없는 경우에 “0”을 부여하여 가변수를 구성하였다. 이 때 동원경로의 다양성은 응답자별로 문항의 가변수를 합한 값, 즉 응답자가 권유를 받은 경로들의 수의 총 합인 가산변수(count variable)로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동원경로는 각 집단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경험 여부에 따른 가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시민성은 “어떤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투표는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투표하는 것은 선택이며, 투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라는 문항과 그 응답범주인 (1) “투표는 의무이다”, (2) “투표는 선택이다”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1)에 응답한 경우에는 “1”을, (2)에 응답한 경우에는 “0”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구성하였다.⁴⁾

지방선거 분석과 국회의원선거 분석에서 모두 응답자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연령, 성별, 혼인상태, 직업유무, 종교유무, 주 성장지가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대졸 미만”, “대졸 이상”으로, 가구소득은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성별, 혼인상태,

간 차이가 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동원경로를 총 7가지로 나누어 측정했는데, 이 중에서 “소속 단체(시민운동단체, 종교단체, 노조, 직업조합, 문화단체 등)의 임원이나 동료”와 “현재 활동 중인 모임(동창모임, 친목단체, 향우회 등)의 임원이나 동료”가 상호배타적인 조건을 위배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를 합하여 “소속단체”로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4) 본 연구가 사용하는 시민성 변수는 사실 제한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다. 이 방식에는 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민적 의무에 초점을 둔 시민성 측정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점에서 이 정보만으로도 본 연구의 분석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에서 사용된 바 있는 시민성 측정으로는 2004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포함된 ‘시민의 의무와 덕목’ 척도가 있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투표의무 외에도 납세의무, 병역의무, 법 준수, 단체참여, 이견(異見)에 대한 이해, 타인을 향한 도움과 봉사를 비롯하여 시민의 의무를 총 10가지로 나누어 물어, 시민성의 차원과 수준을 보다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직업유무, 종교유무는 각각 “여성”, “기혼”, “직업 있음”, “종교 있음”이 “1”의 값을 갖는 가변수로 변환되어 분석에 활용되었고 주 성장지는 “서울”,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제주/기타지역”, “영남”으로 나누어 가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는 <부록표 1>에 제시되어 있다.⁵⁾

3)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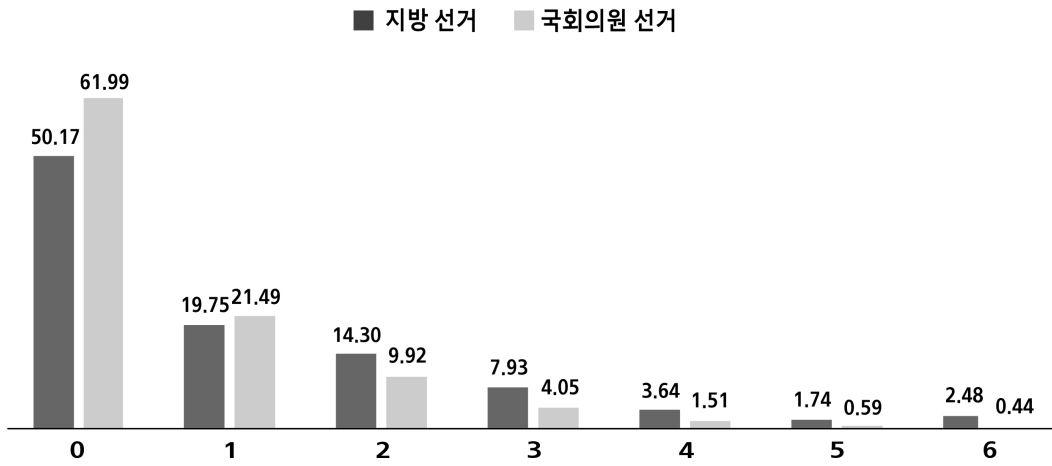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동원경로의 합계, 동원경로, 시민성, 그리고 동원과 시민성 간 상호작용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참여(또는 투표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거참여는 이항변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V.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결과를 통해서 본 동원과 시민성의 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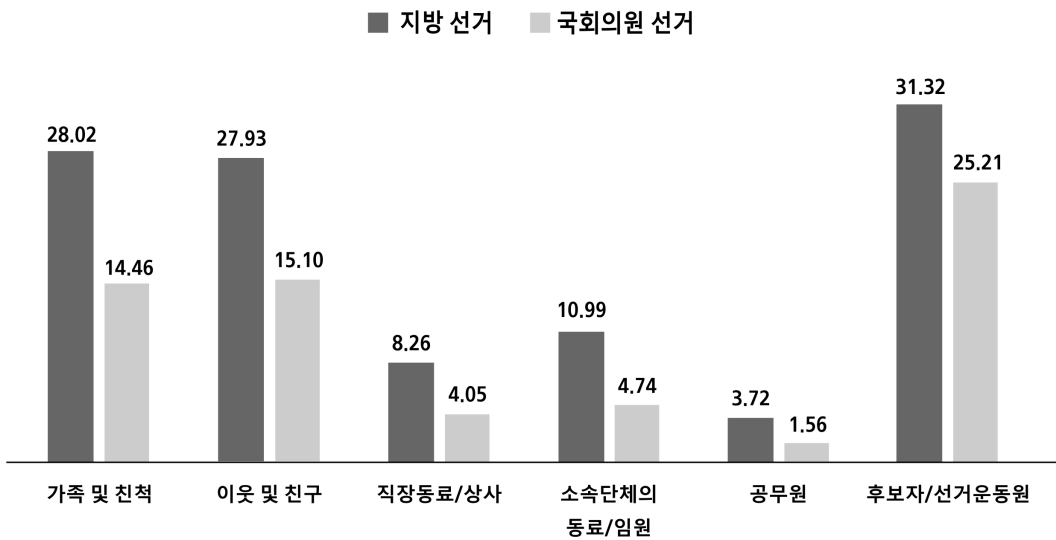
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 수준

먼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정도 동원이 이루어졌는가를 동원경로의 수와 다양성을 통해 살펴보자. 얼마나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지지후보 선택 권유를 받았나를 비교해 보면, 국회의원선거에서보다 지방선거에서 동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경험한 동원의 경로는 평균 0.65개인 데 반해, 지방선거에서는 평균 1.17개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지지요청을 받았다. 지방선거에서는 3개 이상의 경로로부터 지지요청을 받은 비율이 15.8%지만,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동 비율이 8.7%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선거에서보다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후보지지 요청, 즉 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동원에 노출되지 않은 유권자가 62%에 이른다.

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부록표 1>을 참조할 것.



<그림 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경로의 수(다양성)



<그림 2>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경로 유형

<그림2>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경로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은 모든 동원경로에서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선거보다 높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즉 ‘가족 및 친척’, ‘이웃 및 친구’, ‘직장동료/상사’, ‘소속단체(모임)의 동료/임원’, ‘공무원’, ‘후보자’ 등 모든 경로에서 지방선거에서의 동원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사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척’, ‘이웃 및 친구’

를 통한 동원이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많았다.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동원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로는 공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후보자/선거운동원’으로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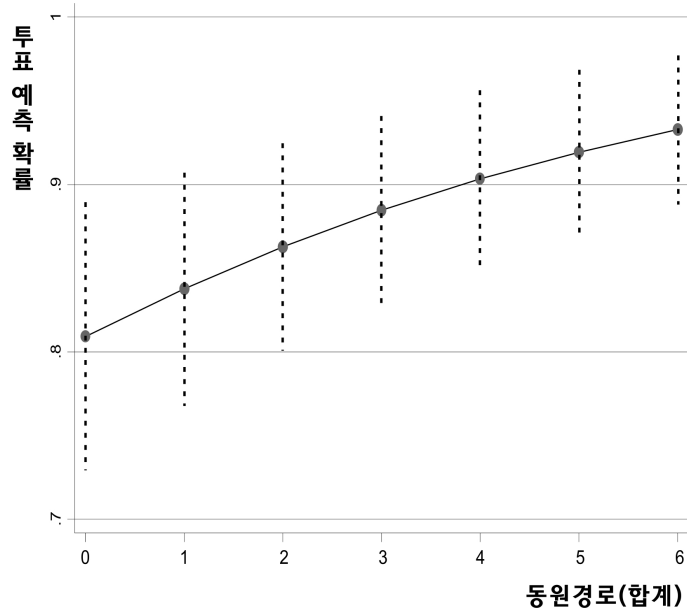
2.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원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

1) 동원경로의 수(다양성)와 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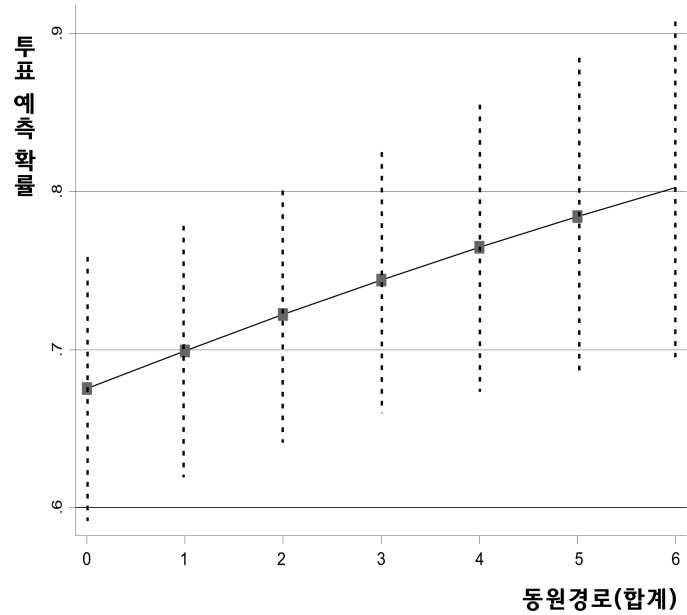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른 사람 혹은 단체 및 모임으로부터 특정 후보지지 요청을 받은 경험이 지방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교육수준, 소득, 연령, 성별, 혼인상태, 직장여부, 종교여부, 주 성장지와 같은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방선거에서는 연령만이 유의미한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교육수준, 소득, 연령, 결혼여부, 종교 등이 선거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부록표 2> 참조). 특히 지방선거에서 연령의 영향력이 강력했는데, 최솟값(19세)에서 최댓값(85세)으로 변할 때, 선거참여 예측 확률은 약 35.1%p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선거참여 예측 확률을 추정해 보면, 교육수준이 “초대졸/대졸 미만”과 “대졸 이상”인 집단은 “고졸”인 집단에 비해 각각 약 8.6%p, 6.7%p 더 높다.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3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선거참여 확률이 약 9.9%p 더 높다. 기혼자 집단은 미혼자 집단보다 약 7.4%p 높으며, 종교가 있는 집단은 무교인 집단에 비해 선거참여 확률이 약 4.7%p 더 높다. 연령은 최솟값인 19세에서 최댓값인 88세로 증가할 때 선거참여 확률이 총 62.1%p 증가한다.⁶⁾

6)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표 예측 확률의 변화는 기타 변수들을 중앙치(median)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추정된 것이다. 교육수준은 “고졸”, 소득은 “300만원 미만”(지방선거의 경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연령은 “45세”, 성별은 “여성”, 혼인상태는 “기혼”, 직장유무는 “직장 있음”, 종교유무는 “종교 있음”, 주 성장지는 “서울”(지방선거의 경우, “경기/인천”)이다. 동원종류(합계)는 동원경험이 없는 경우인 “0”이고 동원 유형 역시 모두 권유받지 않은 “0” 값에 고정시켜 계산하였다.

(1) 2014년 지방선거



(2) 2012년 국회의원선거



〈그림 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참여에 대한 동원경로 수(다양성)의 효과 추정

주1: 그래프에서 점은 동원경로의 수에 따른 투표 예측 확률을, 점선은 델타방식으로 산출된 95%의 신뢰구간을 나타냄.

주2: 이때 “동원경로”의 수(다양성)의 영향력은 기타 변수들을 중앙치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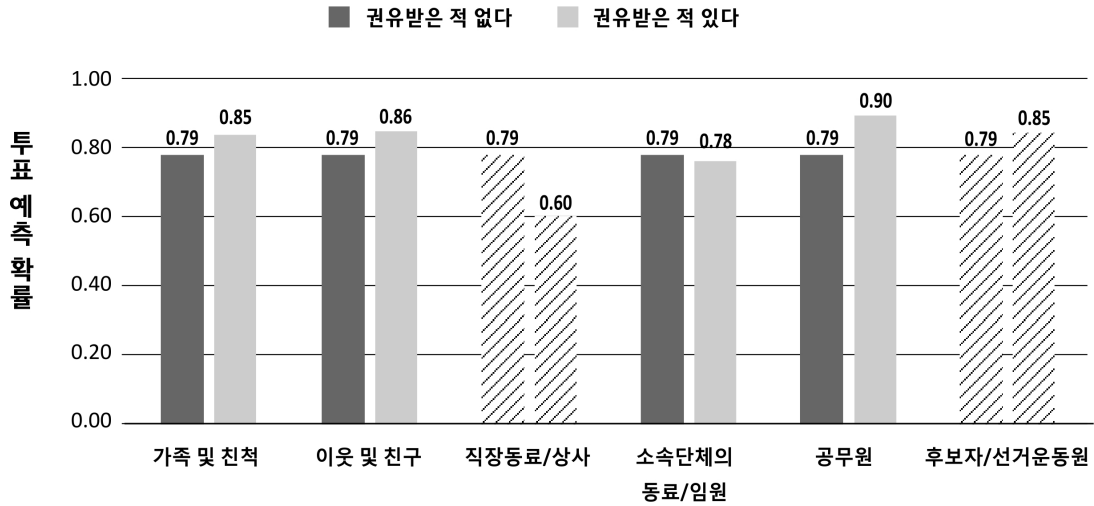
<그림 3>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원경로의 수(다양성)가 선거 참여(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 영향을 살펴보면,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다양한 사람 또는 집단으로부터 특정후보지지요청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선거에 참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경험의 다양성에 따른 투표 예측 확률을 추정해 보면,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참여 및 지지후보 요청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최솟값 0)에서 여러 집단으로부터 동원을 받은 경우(최댓값 6)으로 변할 때, 투표 참여 예측 확률은 약 12.3%p 증가한다.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요청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최솟값 0)에서 여러 집단으로부터 동원을 받은 경우(최댓값 6)로 변할 때, 투표참여 예측 확률은 약 12.7%p 증가한다. 다시 말해, 동원경로의 수(다양성)가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유의미하며, 그 수준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동원경로의 유형과 선거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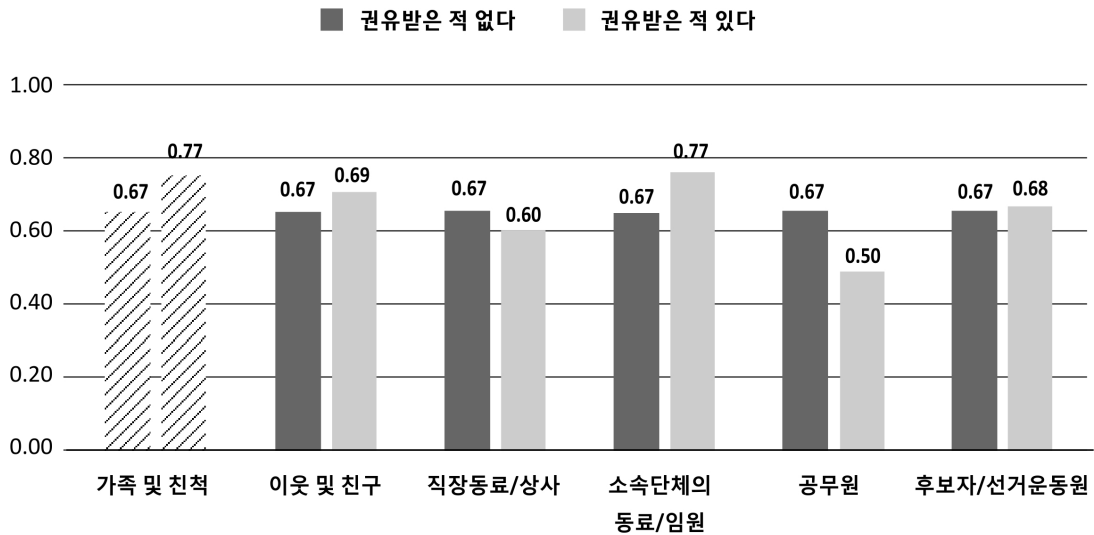
여러 동원경로의 유형이 각각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적용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살펴보았다.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가족이나 친척의 지지요청이 다른 동원경로 유형보다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고 유의미한가를 확인해 보는 식이다.

<그림 4>는 2014년 지방선거와 2012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동원경로의 유형에 따른 선거참여 확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 선거 모두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의 지지요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동원유형에서 동원을 받은 경우가 동원을 받지 않은 경우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상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때 오히려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결과는 흥미로우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1) 2014년 지방선거



(2) 2012년 국회의원선거



〈그림 4〉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참여에 대한 각 동원경로 유형의 효과

주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는 막대그래프에서 실선으로 처리함(유의수준 95%).

2: 각 동원경로 유형의 영향력은 기타 변수들을 중앙치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됨.

도출된 계수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의 동원경로 유형에 따른 투표 예측 정확도 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후보자 및 선

거운동원”으로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를 권유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투표할 예측 확률이 약 6.2%p 증가한다. 지방선거에서 “직장 동료/상사”로부터 지지후보 선택을 권유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투표 예측 확률이 19.3%p 낮아진다. <그림 4>의 결과는 거의 모든 동원경로 유형이 지방선거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과 ‘직장동료/상사’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동원유형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결과를 위의 <그림 2>의 동원유형의 다양성과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지방선거에서 ‘가족과 친척’이나 ‘이웃과 친구’ 등 사적 연고로 맺어진 관계로부터의 동원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선거참여로 이어지는 동원유형은 공식적 관계일 수 있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지방선거에서 공식적 동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역적 범위가 좁고 여러 층위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동시에 ‘가족 및 친척’이나 ‘이웃 및 친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부록표 3> 참조).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동원유형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요청이다. 이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을 통한 직접동원의 효과가 높았던 지방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적인 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동원이 더 영향력을 발휘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가 ‘가족 및 친척’과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의 동원에 더 노출된다거나 이런 유형의 동원이 선거결과를 결정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사적인 관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비교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원이 덜 활발하고 선거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권유가 선거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할 것이다(<부록표 4> 참조).

종합하면, <그림 4>의 결과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모두 동원의 다양성과 유형이 선거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예상한 바이기는 하지만,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방선거와 전국선거(국회의원선거) 간 확연한 차이가 동원의 다양성과 유형을 통해 확인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적인 관계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전국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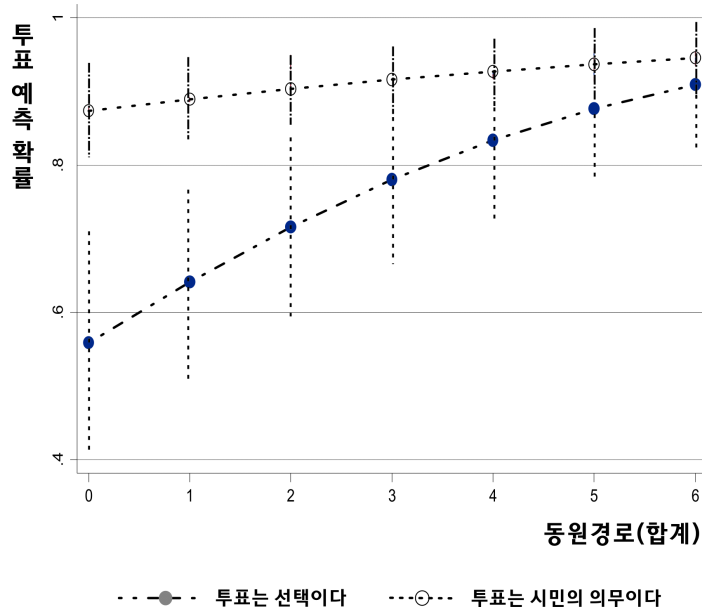
인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결과가 앞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유형에 관계없이 동원이 한국의 선거에서 여전히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루어지는 동원의 수준과 내용에 연결지어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같은 해석이 타당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동원의 효과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3) 시민성에 따른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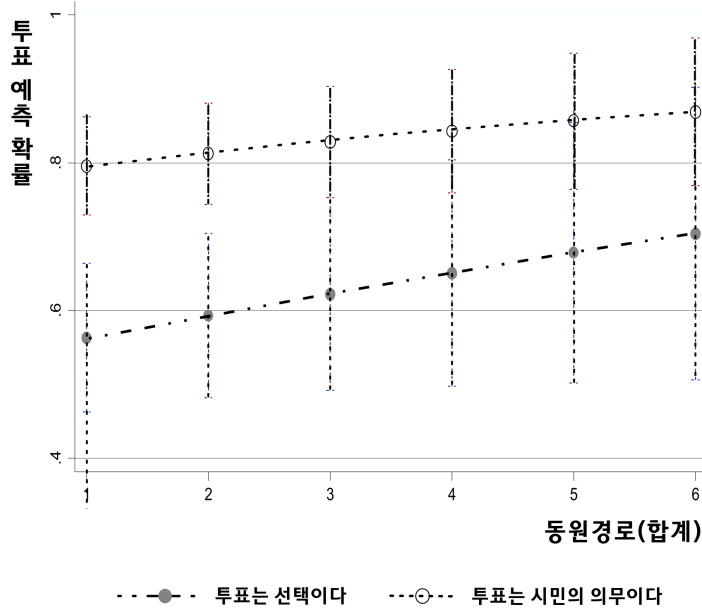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간에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그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라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원과 시민성이 선거참여에 대해 갖는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면,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약 22.8%p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그 확률이 약 23.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예상한 것처럼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지방선거에서보다 더 강하기는 하지만 두 선거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부록표 5>와 <부록표 6> 참조).

선거참여에 대해 갖는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5>는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의 효과가 고려된 상태에서 추정된 선거참여에 대한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준다.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시민의 선택’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동원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최솟값 0)와 다양한 경로에서 동원된 경험이 있는 경우(최댓값 6) 간의 선거참여 확률의 차이는 29.7%p이고, ‘투표는 시민의 의무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그 차이는 약 10.1%p

(1) 2014년 지방선거



(2) 2012년 국회의원선거



〈그림 5〉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참여에 대한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

주1: 점선은 델타방식으로 산출된 95%의 신뢰구간을 나타냄.

2: 이 때 투표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동원경로의 다양성의 상호작용효과는 기타 변수들을 중앙치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됨.

정도였다.⁷⁾ 이는 동원경로의 다양성이 지방선거참여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시민성의 수준에 따라 확연히 다름을 의미한다. 즉 투표에 대한 의무감과 시민성이 낮은 집단에서 동원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동원의 다양성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시민성, 즉 투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즉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특정후보 지지요청을 받는다고 해서 시민성의 유무에 따라 동원으로 인한 투표를 할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는 않는다. 반면, 지방선거에서는 동원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시민성이 낮은 집단의 투표 확률이 동원 노출에 의해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에 대한 시민의 의무감이 강한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이들 중 동원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은 지방선거에서의 시민성이 낮은 집단임이 확인되며, 이 결과는 위의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과 일치한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투표행태에 관한 한국의 기존 연구들이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간에 존재하는 본질적 차이와 그 차이로 인한 선거참여 및 지지후보 선택 과정에 있어서의 차별적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참여 과정에 대한 설명은 지방선거와 전국단위선거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우리는 지방선거와 전국단위선거 간의 차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동원(mobilization)과 시민성(civility)이 선거참여와 맺는 관계에 주목하였다.

7) 투표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기타 변수들을 중앙치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됨.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동원과 시민성의 선거참여에 대한 차별적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과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차별적 효과가 시민성에 의해 선거 종류별로 감소 또는 증가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동원과 시민성 모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참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있었으며,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시민성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간 차이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우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간에 존재하는 투표 과정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라는 시도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예상과 달리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가 두 선거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효과가 시민성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은 선거마다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절반의 성공’보다는 ‘절반의 실패’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동원경로의 다양성과 유형으로 측정된 동원에 대한 노출이 예상과 달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참여의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 앞에서도 우리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한 자료가 동원유형별 내용, 강도, 횟수, 다양성, 중요성 등 동원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록 분석결과는 동원의 다양성과 유형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지만 이 효과를 분해할 수 있다면 두 선거 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동원의 주체가 정당 외에도 친구나 가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동원경험과 그 경로를 보다 확대하여 다양하게 살펴 보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각각의 동원 경로에서 이루어진 동원의 강도와 빈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와 관련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측정이 요구된다. 가령, 각각의 집단으로부터 선거참여 또는 지지후보 권유를 받은 횟수, 비접촉방식(전화, 우편, 문자, e-mail, SNS)을 통해 권유받은 경험 등에 대

한 세밀한 측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SNS의 발달과 모바일을 통한 선거운동의 확산으로 진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원방식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민성에 대한 측정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사용한 시민성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기는 하였어도 가장 단순화된 형태의 측정으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즉 동원과 시민성의 선거참여에 대한 상호작용효과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결과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시민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한 자료는 시민성을 ‘투표’와 관련된 시민적 의무로 측정할 뿐이다. 보통 시민성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은 시민성을 분석적 차원에서 ‘의무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 ‘세계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민성’ 등으로 구성한다(Bolzendahl & Coffé 2013). 본 연구는 ‘의무를 바탕으로 한 시민성’에서 대표적으로 측정되는 것 중 하나인 ‘투표에 대한 의무’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는 선거참여에서 갖는 시민성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분석했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시민성의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여, 시민적 덕목, 동원, 선거참여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 연구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구가 한국의 지방선거와 전국선거 간 투표행태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론적 및 경험적 접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선거종류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후보자 선택 과정이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야 하며, 특히 지방선거와 전국선거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선거참여와 후보자 선택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적 접근은 계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0. “천안함 사건은 지방선거의 변수였나?” 《EAI 오피니언 리뷰》. 동아시아연구원(201006-01).
- 김경동. 1985. 《한국사회 증후군》.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석호. 2014. “시민사회에 대한 경험적 접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발표.
- 김석호. 2013. “투표와 정치참여.” 통계청 편. 《한국의 사회동향, 2013》.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석호·박바름. 2012. “동원의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선택에 대한 차별적 효과.”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분석》. 나남.
- 김영태. 2012.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 19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 45-69.
- 박찬욱·강원택 외. 2012. 《2012년 국회의원선거분석》. 나남.
- 박찬욱·강원택 외. 2013. 《2013년 대통령 선거분석》. 나남.
- 박찬욱·김지윤·우정엽 외. 2012. 아산정책연구원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아산정책연구원.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 이남영. 1993. 《한국의 선거 I》. 나남.
- 이내영·임성학 외. 2011.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동아시아연구원.
- 이내영·서현진 외. 2013.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5-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동아시아연구원.
- 석현호 외. 2005. 《KGSS 한국종합사회조사(200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생각의 나무.
- 정영국. 1993. “국회의원선거과정의 체계론적 분석.” 이남영편 《한국인의 선거 I》. 나남.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아카이브(<http://www.ksdcdb.kr>).

- Arceneaux, K. and D.W. Nickerson. 2009. "Who Is Mobilized to Vote? A Re Analysis of 11 Field Experi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1): 1-16.
- Bolzendahl, C., and H. Coffé. 2013. "Are 'Good' Citizens 'Good' Participants? Testing Citizenship Norm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cross 25 Nations." *Political Studies* 61(S1): 45-65.
- Brady, H.E., K.L. Schlozman, and S. Verba. 1999. "Prospecting for Participants: Rational Expectations and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Activis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53-168.
- Caren, N. 2007. "Big City, Big Turnout?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n Cities." *Journal of Urban Affairs* 29(1): 31-46.
- Carr, J.B. and A. Tavares. 2014. "City Siz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Reassessing the Contingent Effects of Residential Location Decisions Within Urban Regions." *Urban Affairs Review* 50(2): 269-302.
- Chang, Y.S. 1991. "The Personalist Ethic and the Market in Kore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33(01): 106-129.
- Degan, A. 2013. "Civic Duty and Political Advertising." *Economic Theory* 52(2): 531-564.
- Fennema, M. and J. Tillie. 199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Trust in Amsterdam: Civic Communities and Ethnic Network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5(4): 703-726.
- Frisco, M.L., C. Muller, and K. Dodson. 2004. "Participation in Voluntary Youth Serving Associations and Early Adult Voting Behavior." *Social Science Quarterly* 85(3): 660-676.
- Green, M.C. and T.C. Brock. 2005. "Organizational Membership Versus Informal Interaction: Contributions to Skills and Perceptions that Build Social Capital." *Political Psychology* 26(1): 1-25.
- Hajnal, Z.L. and P.G. Lewis. 2003. "Municipal Institutions and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Urban Affairs Review* 38(5) : 645-668.
- Holbrook, T.M. 2010. "Do Campaigns Really Matter?" In Stephen Craig and

- David Hill. *The Electoral Challenge: Theory Meets Practice*(2nd ed.). 1-20, Thousand Oaks, CA: CQ Press.
- Holbrook, T.M. and A.C. Weinschenk. 2013. "Campaigns, Mobilization, and Turnout in Mayor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7(1): 42-55.
- Huckfeldt, R., P.A. Beck, R.J. Dalton, and J. Levine. 1995. "Political Environments, Cohesive Social Groups, and the Communication of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25-1054.
- Kim, C.L.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ed Voting." In Kim.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119-141. Santa Babara: ClioBooks.
- Kim, S.H. 2011. "Voluntary Associations, Social Inequali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3): 125-154.
- Knoke, D. 1990. "Networks of Political Action: Toward Theory Construction." *Social Forces* 68(4): 1041-1063.
- Knoke, D. 1990. *Organizing for Collective Action: The Political Economies of Association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Letki, N. 2004. "Socialization for Participation? Trust, Membership, and Democratization in East-central Europ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7(4): 665-679.
- Nickerson, D.W. 2008. "Is Voting Contagious? Evidence from Two Field Experim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01): 49-57.
- Oliver, J.E., S.E. Ha, and Z. Callen. 2012. *Local Elections and the Politics of Small-scal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liver, J.E. and S.E. Ha. 2007. "Vote Choice in Suburban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1(03): 393-408.
- Panagopoulos, C. 2010. "Affect, Social Pressure and Prosocial Motivation: Field Experimental Evidence of the Mobilizing Effects of Pride, Shame and Publicizing Voting Behavior." *Political Behavior* 32(3): 369-386.
- Panagopoulos, C. 2013. "Positive Social Pressure and Prosocial Motivation: Evidence from a Large Scale Field Experiment on Voter Mobilization."

- Political Psychology* 34(2): 265-275.
- Panagopoulos, C., C.W. Larimer, and M. Condon. 2014. "Social Pressure, Descriptive Norms, and Voter Mobilization." *Political Behavior* 36(2): 451-469.
- Putnam, R.D. 1995.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 664- 683.
- Putnam, R.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stone, S.J. and J.M. Hansen.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 Schaffner, B.F., M. Streb, and G. Wright. 2001. "Tearns Without Uniforms: The Nonpartisan Ballot in State and Local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7-30.
- Wolf, M.R., J.C. Strachan, and D.M. Shea. 2012. "Incivility and Standing Firm: A Second Layer of Partisan Division."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5 (03): 428-434.
- Wood, C. 2002. "Voter Turnout in City Elections." *Urban Affairs Review* 38(2): 209-231.

<접수 2015/7/17, 게재확정 2015/8/4>

부록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변수	2014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선거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투표	2,016	0.71		1,206	0.77	
동원경로(합계)	2,016	0.65	1.05	1,206	1.10	1.48
가족 및 친척	2,016	0.14		1,206	0.28	
이웃 및 친구	2,016	0.15		1,206	0.28	
직장동료/상사	2,016	0.04		1,206	0.08	
소속단체의 동료/임원	2,016	0.05		1,206	0.11	
공무원	2,016	0.02		1,206	0.04	
후보자/선거운동원	2,016	0.25		1,206	0.31	
시민성 (투표에 대한시민의 태도)	2,016	0.65		1,206	0.75	
교육수준						
고졸 미만	2,016	0.18		1,206	0.19	
고졸	2,016	0.39		1,206	0.42	
초대졸/대졸 미만	2,016	0.18		1,206	0.10	
대졸 이상	2,016	0.25		1,206	0.29	
소득수준						
300 만원 미만	2,016	0.37		1,206	0.34	
300~399 만원	2,016	0.24		1,206	0.24	
400~499 만원	2,016	0.19		1,206	0.19	
500 만원 이상	2,016	0.19		1,206	0.23	
연령	2,016	45.17	15.06	1,206	45.74	15.91
여성	2,016	0.50		1,206	0.51	
기혼	2,016	0.72		1,206	0.68	
직장 있음	2,016	0.70		1,206	0.70	
종교 있음	2,016	0.50		1,206	0.50	
주 성장지						
서울	2,016	0.17		1,206	0.18	
경기/인천	2,016	0.19		1,206	0.17	
강원/충청	2,016	0.18		1,206	0.18	
호남/제주	2,016	0.17		1,206	0.18	
영남	2,016	0.30		1,206	0.30	

부록 2. 동원경험이 지방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동원종류(합계)			0.197***	0.057		
동원(가변수)						
가족 및 친척					0.388	0.215
이웃 및 친구					0.451	0.238
직장동료/상사					-0.932**	0.337
소속단체의 동료/임원					-0.058	0.324
공무원					0.848	0.594
후보자/선거운동원					0.429*	0.188
통제변수						
교육수준(고졸=1)						
고졸 미만	0.295	0.308	0.352	0.310	0.326	0.313
초대졸/대졸 미만	-0.231	0.233	-0.277	0.236	-0.239	0.239
대졸 이상	0.332	0.174	0.311	0.175	0.296	0.176
소득(300만원 미만=1)						
300~399만원	0.365	0.221	0.436	0.224	0.400	0.226
400~499만원	-0.008	0.223	0.078	0.227	0.092	0.229
500만원 이상	-0.036	0.217	0.024	0.220	0.019	0.222
연령	0.046***	0.008	0.046***	0.008	0.046***	0.008
여성	0.060	0.155	0.012	0.157	-0.042	0.159
기혼	0.140	0.193	0.111	0.195	0.107	0.196
직장 있음	0.032	0.173	-0.025	0.175	0.030	0.176
종교 있음	0.176	0.153	0.178	0.154	0.189	0.155
주성장지(1=서울)						
경기/인천	0.038	0.234	-0.019	0.235	0.009	0.237
강원/충청	-0.339	0.241	-0.424	0.244	-0.395	0.247
호남/제주	0.397	0.263	0.332	0.265	0.386	0.269
영남	0.087	0.216	0.107	0.217	0.190	0.220
상수	-1.194**	0.368	-1.332***	0.373	-1.416***	0.379
사례 수	1,206		1,206		1,206	
Log-likelihood	-580.31		-573.66		-566.62	
LR chi ²	139.19***		152.49***		166.57***	
Pseudo R ²	0.1071		0.1173		0.1281	

주: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3. 동원경험이 국회의원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동원종류(합계)			0.112*	0.054		
동원(가변수)						
가족 및 친척					0.515**	0.183
이웃 및 친구					0.081	0.174
직장동료/상사					-0.326	0.299
소속단체의 동료/임원					0.471	0.312
공무원					-0.699	0.463
후보자/선거운동원					0.029	0.133
통제변수						
교육수준(고졸=1)						
고졸 미만	0.118	0.206	0.124	0.207	0.097	0.208
초대졸/대졸 미만	0.446**	0.156	0.440**	0.157	0.471**	0.158
대졸 이상	0.338*	0.140	0.330*	0.140	0.337*	0.141
소득(300만원 미만=1)						
300~399만원	0.233	0.144	0.237	0.144	0.229	0.145
400~499만원	0.054	0.152	0.054	0.153	0.033	0.154
500만원 이상	0.520**	0.162	0.501**	0.163	0.468**	0.164
연령	0.057***	0.006	0.056***	0.006	0.057***	0.006
여성	-0.159	0.114	-0.158	0.114	-0.178	0.115
기혼	0.328*	0.140	0.311*	0.140	0.321*	0.140
직장 있음	-0.021	0.125	-0.021	0.125	0.014	0.127
종교 있음	0.216*	0.109	0.210	0.109	0.218*	0.109
주성장지(1=서울)						
경기/인천	-0.104	0.172	-0.110	0.173	-0.084	0.174
강원/충청	-0.094	0.180	-0.080	0.181	-0.045	0.182
호남/제주	0.096	0.187	0.089	0.187	0.114	0.188
영남	-0.054	0.160	-0.039	0.160	-0.003	0.161
상수	-2.097***	0.295	-2.139***	0.296	-2.217***	0.300
사례 수	2,017		2,017		2,017	
Log-likelihood	-1078.73		-1076.48		-1071.21	
LR χ^2	284.17***		288.66***		299.20***	
Pseudo R^2	0.1164		0.1182		0.1225	

주: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4. 지방선거참여에 대한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시민성 (투표에 대한 의무감)	1.455 ^{***}	0.158			1.510 ^{***}	0.161	1.700 ^{***}	0.199
동원종류(합계)			0.197	0.057	0.240 ^{***}	0.060	0.345 ^{***}	0.090
시민성*동원종류							-0.193 ⁺	0.116
통제변수								
교육수준(고졸=1)								
고졸 미만	0.220	0.321	0.352	0.310	0.293	0.324	0.302	0.326
초대졸/대졸 미만	-0.188	0.246	-0.277	0.236	-0.259	0.249	-0.277	0.250
대졸 이상	0.266	0.181	0.311	0.175	0.238	0.183	0.240	0.183
소득(300만원 미만=1)								
300~399만원	0.330	0.232	0.436	0.224	0.427 ⁺	0.235	0.434 ⁺	0.236
400~499만원	-0.127	0.234	0.078	0.227	-0.013	0.238	-0.013	0.239
500만원 이상	-0.094	0.226	0.024	0.220	-0.010	0.230	-0.003	0.231
연령	0.043 ^{***}	0.008	0.046 ^{***}	0.008	0.044 ^{***}	0.008	0.044 ^{***}	0.008
여성	0.045	0.163	0.012	0.157	-0.015	0.166	-0.004	0.167
기혼	0.150	0.201	0.111	0.195	0.110	0.204	0.111	0.204
직장 있음	0.110	0.182	-0.025	0.175	0.047	0.184	0.045	0.185
종교 있음	0.048	0.161	0.178	0.154	0.044	0.162	0.034	0.163
주성장지(1=서울)								
경기/인천	0.028	0.245	-0.019	0.235	-0.043	0.247	-0.044	0.247
강원/충청	-0.294	0.255	-0.424	0.244	-0.384	0.257	-0.385	0.258
호남/제주	0.366	0.275	0.332	0.265	0.286	0.277	0.288	0.278
영남	0.049	0.227	0.107	0.217	0.082	0.229	0.097	0.230
상수	-1.963 ^{***}	0.394	-1.332 ^{***}	0.373	-2.176 ^{***}	0.403	-2.305 ^{***}	0.413
사례 수	1,206		1,206		1,206		1,206	
Log-likelihood	-537.86		-573.66		-529.144		-527.778	
LR chi ²	224.10 ^{***}		152.49 ^{***}		241.53 ^{***}		244.26 ^{***}	
Pseudo R ²	0.172		0.117		0.186		0.188	

주: + <.1 * p<.05, ** p<.01, *** p<.001

부록 5. 국회의원선거참여에 대한 동원과 시민성의 상호작용 효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시민성	1.111 ^{***}	0.111			1.112 ^{***}	0.111	1.122 ^{***}	0.129
동원(합계)			0.112 [*]	0.054	0.114 [*]	0.055	0.123	0.081
시민성*동원							-0.016	0.110
통제변수								
교육수준								
고졸 미만	0.131	0.211	0.124	0.207	0.135	0.211	0.135	0.211
초대졸/대졸 미만	0.342 [*]	0.161	0.440 ^{**}	0.157	0.336 [*]	0.161	0.336 [*]	0.161
대졸 이상	0.265 ⁺	0.145	0.330 [*]	0.140	0.257 ⁺	0.145	0.257 ⁺	0.145
소득(300 만원 미만=1)								
300~399 만원	0.106	0.149	0.237 ⁺	0.144	0.110	0.149	0.110	0.149
400~499 만원	-0.052	0.157	0.054	0.153	-0.053	0.158	-0.053	0.158
500 만원 이상	0.391 [*]	0.167	0.501 ^{**}	0.163	0.371 [*]	0.168	0.371 [*]	0.168
연령	0.051 ^{***}	0.006	0.056 ^{***}	0.006	0.051 ^{***}	0.006	0.051 ^{***}	0.006
여성	-0.210 ⁺	0.118	-0.158	0.114	-0.208 ⁺	0.118	-0.207 ⁺	0.118
기혼	0.313 [*]	0.144	0.311 [*]	0.140	0.295 [*]	0.145	0.295 [*]	0.145
직장 있음	0.047	0.129	-0.021	0.125	0.047	0.129	0.047	0.129
종교 있음	0.185 ⁺	0.112	0.210 ⁺	0.109	0.179	0.112	0.179	0.112
주성장지(서울=1)								
경기/인천	-0.042	0.178	-0.110	0.173	-0.049	0.178	-0.049	0.178
강원/충청	-0.090	0.185	-0.080	0.181	-0.076	0.185	-0.076	0.185
호남/제주	0.094	0.193	0.089	0.187	0.086	0.193	0.085	0.193
영남	-0.054	0.164	-0.039	0.160	-0.036	0.165	-0.036	0.165
상수	-2.405 ^{***}	0.305	-2.139 ^{***}	0.296	-2.451 ^{***}	0.307	-2.456 ^{***}	0.308
사례 수	2,016		2,016		2,016		2,016	
Log-Likelihood	-1,027.443		-1,076.48		-1,025.236		-1,025.226	
LR chi ²	386.040 ^{***}		288.660 ^{***}		390.453 ^{***}		390.47 ^{***}	
Pseudo R ²	0.158		0.118		0.160		0.160	

주: + <.1 * p<.05, ** p<.01, *** p<.001